- 나주 식품소재
- 순천·곡성 미생물
- 장흥 천연물

전남도, 그린바이오 3대축 토대 혁신모델 구축

농림부 육성지구 지정…대한민국 농업 미래 선도할 계기 마련 농업생명자원·생명공학기술·IT 접목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전남도가 식품소재, 천연물, 미생물 등 '그린바이오' 3대 핵심 분야를 토대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미생물융합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를 비롯, 전국 7 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 해다

육성지구 지정에 따라 전남은 그린바이오 분야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바이오파운드리, 소재 산업화시설 등 국비 인프라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기반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지정은 올해 1월 시행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에 따라 지방 주도의 자율적인 전략 설계 방식으로 전환된 정부 정책의 첫 결실로, 전남의 풍부한 농업생명자원과 혁신 연구개발 역량이 높 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축산물, 미생물, 천연물 등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하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커지고 있으며, 2020년 1조 2000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시장은 2031년 3조 9000억 달러로 3배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대 시장이다.

전남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국 농지 면적의 18.2%, 농 업 생산량의 19%는 물론 친환경인증 면적 (50.3%)과 아열대작물재배면적(59.0%)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이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혁신적인 연구개발 역량까지 갖춰 이번 육성지구 지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는 이번 지정 평가에서 숙면 효과가 뛰어 난 흑하랑 상추를 활용한 건강차, 눈 피로 개선에 효과적인 차즈기 제품, 유자 부산물에서 추출한 화장품 원료 등을 실적으로 제출하며 전남이 보유 한 자원의 잠재력과 기술력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발판 삼아 '전 남형 그린바이오 혁신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나주는 식품소재 분야, 장흥은 천연물 분야, 순천· 곡성은 미생물 분야의 핵심 축으로 삼아 3대 그린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방 침이다.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식품기능성 평가 등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받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있다.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환영문을 통해 "지·산·학·연 협력체계를 탄탄히 구축해 전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 심지로, 글로벌 그린바이오산업의 대표 모델로 만 들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삼석 의원, 전남지사 사실상 불출마…최고위원직 유지

내년 지방선거 출사표 낸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사퇴 민주당 지도부 6인 체제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 원이 지도부에서 사임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전남지사에 불출마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오는 3일까지 지도부를 사퇴해야 하는데 사퇴 시한 이전 마지막 지도부 회의에서 사퇴 의사 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1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현희 (서울 시장)·한준호·김병주(이상 경기지사) 최고 위원이 이날 최고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 지도부에서 사임했고 서 의원은 최고위원 직을 유지했다.

정청래 지도부는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및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선출직최고 위원과 및 서삼석 지명직 최고위원, 평당원 중 선 출한 박지원 최고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

당헌·당규상 이 가운데 5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

대위 체제로 전환하지만 이날 3명의 최고위원만 지 도부에서 물러나면서 현 지도부는 유지된다. 공석 인 최고위원은 조만간 보궐선거를 통해 선임된다.

이날 정청래 대표는 사퇴한 최고위원 3명에게 꽃다발을 건네면서 "우리가 한 공간에 있었던 것이 우연일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필연이었음을 입증해주길 바란다.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신상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와 소외 없는 돌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광주시당 지선 공약개발단 출범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개발 전담기구를 조기에 띄웠다.

1일 국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날 시당 회의실에서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개발단' 발대식 및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했다.

개발단은 안태욱 시당위원장과 조영탁 광주대 교수가 공동 사령탑을 맡았고, 실무는 임한필 부 단장(전 여의도연구원 객원연구원)이 총괄한다.

외연확장을 위해 김용임 시의원 등 기존 조직은 물론 문화·경제 전문가와 지역 대학생들까지 대거 영입했다. 개발단은 앞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5 개 분과별 집중 논의를 통해 지역 의제를 발굴한 뒤, 내년 1월 중앙당과 조율을 거쳐 '광주형 정책 공약집'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안태욱 위원장은 이날 "내년 선거는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현 정부와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아낼 중대 분수령"이라며 "광주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생 우선 대안 정당' 으로서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

광주 서구 마륵·치평동 34만㎡ 토지거래허가제 5년 더 연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지인 광주시 서구 마륵·치평 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가 5년 더 연장된다.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이 늦어지며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서구 치평·마륵동 일원 34만3974㎡ (332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이번 재지정에 따른 규제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당초 해당 지역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요인을 반영해 기간을 연장했다. 향후 2026년 사업시행자 선정 및 실시계획 수립

을 거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편입 토지 보상과 본격적인 조성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光산업 유산, 양자기술로 승화…AI 인프라, K-방산 두뇌로 이식

방산·양자산업 토대 마련 나선 광주시

산업 지도 판 바꾸기 승부수

광주시가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낙점한 '양자 (Quantum)'와 '방위산업(Defense)'은 단순한 신규 먹거리 발굴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지난 30년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광(光) 산업'의 유산을 미래 핵심 기술인 양자로 승화시 키고, 탄탄하게 다져온 AI 인프라를 'K-방산'의 두뇌로 이식하겠다는 광주만의 생존 전략이자 필 연적 선택으로 읽힌다. 선점하고 있는 분야를 융 합해 산업 지도의 판을 바꾸겠다는 '승부수'를 띄 운 셈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양자 기술을 기존 광산업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 양자 기술의 핵심인 제어와 통신이 결국 빛(광자)을 다루는 기술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시는 한국광기술원(KOPTI)과 광주과학기술 원(GIST) 등 이미 세계적 수준의 광학 연구 역량 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로 등 단일광자 검출기(SPAD) 기술을 가진 탄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광주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조례안에 '양자팹(Fab)' 구축이 포함 된 것도 이 때문이다.

타지역이 기초 연구에 집중할 때 광주는 축적된 광산업 제조 라인을 활용해 양자 소자를 직접 만들고 검증하는 '실증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양자 센싱과 통신 분야에서 타 지자체가따라올 수 없는 광주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 전략 역시 '광주형' 모델을 택했다. 창 원이나 구미처럼 대규모 무기 체계 조립 공장은 없 지만, 무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두뇌'는 광주가 맡 겠다는 구상이다. 바로 '국방 반도체'다.

최근 K-방산의 트렌드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 프트웨어와 AI 기반의 지능형 무기로 넘어가고 있 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광주에는 에이직랜드, 에임퓨처 등 유망한 AI 반도체 팹리스(설계)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 다. 시는 이들 기업의 기술력을 국방 분야에 접목 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방용 반도체와 소프트웨 어 국산화를 주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광주가 추진 중인 AI 반도체 클러스터와도 정확히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 결국, 시의 지향점은 2026년으로 예정된 정부

의 클러스터 공모 사업이다. 대전, 부산 등 경쟁 도 시들 역시 양자와 방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광기반 양자 소부장' 과 '국방 팹리스' 라는 확실한 킬러 콘텐츠를 앞세워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산·학·연 역량을 한데 모아 '준비된도시'임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양자와 방산은 진입 장벽이 높지만, 선점 효과가 확실한 미래 산업"이라며 "광주의 기존 주력 산업과 결합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느냐가 2026년 클러스터 유치전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